

EU Brief

| EU 동향 |

- 유럽을 휩쓸고 있는 두 가지 공포
Europe's double trouble
- 최근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대한 독일의 입장
Germany's stance on eurozone financial crisis
- EU 통합을 위협하는 유럽의 극우정당
Far right politics in Europe threatens integration
- 한국의 대EU 수출구조와 FTA 활용방안
Korea's export structure to the EU and application of the FTA
- EU 주요국의 정책 변화로 타격을 입은 원전산업
EU nuclear power industry after Fukushima disaster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EU Focus

유럽을 휩쓸고 있는 두 가지 공포 002
Europe's double trouble



EU Economy

최근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대한 독일의 입장 004
Germany's stance on eurozone financial crisis



EU Politics

EU 통합을 위협하는 유럽의 극우정당 009
Far right politics in Europe threatens integration



Trade & Investment

한국의 대EU 수출구조와 FTA 활용방안 013
Korea's export structure to the EU and application of the FTA



Industry Trends

EU 주요국의 정책 변화로 타격을 입은 원전산업 017
EU nuclear power industry after Fukushima disaster



EU Law

한국 법률시장 개방과 영국 로펌의 대응 023
Opening up of legal service market in Korea and British law firms' response



Social Issues

다양한 유럽 사회 모델의 역사적 경로 027
Diversity in Europe's social model



Report Review

환경규정은 무역에 걸림돌인가 032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Trade



EU Centre news

제7회 브뤼셀 포럼 034
The 7th Brussels Forum

제11회 EU Core-Circle Society 세미나 035
The 11th Core-Circle Society Seminar

제2회 EU Week 개최 036
The 2nd EU Week celebrated

한국-EU 포럼 공동 주최기관으로 선정 039
Korea-EU Forum Co-Sponsored

EU Brief는 EU 집행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Yonsei-SERI EU Centre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입니다.
The EU Brief is a newsletter published by the Yonsei-SERI EU Centre and fund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본지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위원: 이종규 | 감수위원: 김득갑 | 편집담당: 정민경 | EU Brief에 게재된 내용에 관한 문의나 개선사항은 편집담당(02-3780-830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을 휩쓸고 있는 두 가지 공포

Europe's double trouble

전 유럽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공포에 떨고 있다. 2011년 5월 말부터 독일 북부지역을 휩쓸기 시작한 장출혈성대장균(EHEC)은 2,700명에 가까운 감염자와 3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지만, 그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독일에 근접한 영국, 덴마크, 스웨덴은 물론 전 유럽이 슈퍼박테리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10명을 넘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독일 보건 당국은 5월 26일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역의 오이 농가를 박테리아의 진원지로 지목하였다. 스페인 정부는 즉각 “정작 스페인에는 감염자와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다”며 항의하였지만, 독일정부는 이를 EU 집행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조사에 착수하였다. 5월 31일 스페인 오이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스페인 정부는 크게 반발하였다. 이미 벨기에, 오스트리아, 체코 등 유럽 각국이 스페인산 채소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물량 회수에 나서 매일 2억 유로(약 3,1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금전적 손실보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EU 회원국 사이에서 또다시 ‘신뢰의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로사 아길라르 스페인 농업장관은 “독일이 아무 증거도 없이 대장균 오염 책임을 스페인에게 돌려 돌리길 수 없는 국가 이미지 손상을 줬다”고 비난하였다.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독일과 스페인 모두를 싸잡아 “독일과 스페인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두 정부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평가하였다.

EU는 심리적 공황상태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EU 농업개발 최고책임자는 “슈퍼박테리아보다 무서

운 신뢰의 위기가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또 영문 주간지 『유러피언 보이스(European Voice)』는 독일이 정확한 과학적 근거 없이 설블리 스페인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여 EU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고 논평하였다.

현재 유럽을 휩쓸고 있는 또 하나의 슈퍼박테리아가 있다. 치료를 거듭해도 계속 재발하고 있는 재정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재정위기로 가장 많은 손실(지원금 부담)을 떠안은 독일은 이번에도 스페인 등 남부유럽을 탓하고 있다. 변종이 거듭되고 있는 재정위기 슈퍼박테리아 역시 EU 회원국 내부에 상호 신뢰문제를 불러일으키며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분담금을 책임지고 가장 훌륭한 수출 성적을 내고 있는 독일이 그렇지 못한 회원국의 재정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공통 통화인 유로화를 사용하는 회원국은 경제위기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화정책에서 손발이 묶여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유럽지역의 경제문제는 EU 공통의 문제로 인식해야지 한 국가 차원의 문제일 수는 없다.

장출혈성 대장균 슈퍼박테리아와 재정위기 슈퍼박테리아의 공통점은 또 있다. 이미 유럽 국경을 넘나들며 퍼지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가 위기의 원인을 이웃 국가에 돌리는 것은 무의미한 출혈만 키울 뿐이라는 것이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신뢰에 바탕을 둔 공동체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위기를 EU 공통의 문제로 이해하고 극복할 때 EU는 ‘통합’이라는 더욱 강력한 백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The European Union is currently cowering in fear with unknown causes. Since the end of May, E. coli outbreak has infested over 2,700 and killed over 25 people in the northern region of Germany. With its causes still undetermined, the entire European continent is highly alarmed, especially the neighboring nations such as the U.K., Denmark, and Sweden.

Once the death toll surpassed ten and the outbreak seemed to worsen, the German health authorities pointed to cucumbers from Andalusia of Spain as the deadly bacteria's origin on May 25th. Although the Spanish government immediately countered stating that “not a single contaminant or victim has been reported in Spain,” the German government continued to file an official report to the EU commission and began formal investigations. The Spanish government was infuriated when it was concluded that Spanish cucumbers were not the source of the disease on May 31st as other countries in Europe including Belgium, Austria, and the Czech Republic had already prohibited imports of Spanish vegetables, resulting in loss of 20 million euros per day.

However, the biggest worry is not the financial losses but rather the reappearance of the crisis of confidence among the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The Spanish Minister of Agriculture criticised the German government saying that “Germany held Spain responsible for the E. coli outbreak without any evidence and has irreversibly tarnished Spain's image.” France has grouped Germany and Spain together and demanded that “both the German and Spanish government be completely transparent and reveal all relevant information on this incident (French Minister of Health).” It added that it has become difficult to trust either government.

The European Union is warning of a psychological panic throughout the continent. The EU Commissioner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tated that “a crisis of confidence, more frightening than the bacteria itself, has begun to spread.” European Voice, a British magazine, commented that Germany's rash and ungrounded accusation of Spain has destroyed the possibility of a united EU effort to resolve the problem.

E. coli is not the only plague sweeping through Europe. Persisting through numerous attempted treatments, the EU financial crisis is another epidemic demanding a remedy. Since the crisis began, Germany has been burdened as it had to rescue peripheral countries. The continuing financial crisis is also contributing to the erosion of confidence inside the European Union, making finding a solution all the more difficult.

From the outside, Germany, which carries the largest share of the financial burden while demonstrating impressive numbers in exports, seems to be justified in criticising other nations that are not performing as well. However, considering that no eurozone member state can use its own monetary policy as they share their currency, the financial crisis cannot be a predicament for any single member country but rather for the entire union.

The E. coli bacteria and the financial crisis share another similarity in common. With both crises spreading past the European boundaries, pinpointing the cause on a single nation is not only meaningless but exacerbating. In order to finally find a resolution, a united collaboration of the member states is necessary based on trust and confidence. Only when the crisis is recognized and confronted as a common threat will the cure called “unity” become available for the union. ★





최근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대한 독일의 입장

Germany's stance on eurozone financial crisis

While the possibility of debt restructuring has been rising in a number of eurozone countries, Germany has recently captured the attention as its economy has achieved the strongest rise recorded since the reunification. Germany, which accounts for one-fifth of the EU's economy, has led the currency integration process of Europe and played an instrumental role in solving the eurozone financial crisis. Germany, traditionally known for its strict macroeconomic policies, has been putting hard pressure on peripheral countries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to solve the current fiscal crisis. However, as Germany is regarded as the main beneficiary of the euro and as the stability of the eurozone is directly connected with its interest, it is inevitable for Germany to lead the negotiations on providing the financial package. As can be seen from Germany's "No fiscal union without fiscal discipline" stance, Germany will continue to demand eurozone members to reform their fiscal and financial governance as to push forward the economic integration process.

독일경제만 나 홀로 선전을 계속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시작된 유로지역의 재정위기는 일부 국가의 구제금융을 거쳐 채무조정 논의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한 침체의 터널을 지나고 있으며, 금융시장은 유로지역 4위의 경제규모를 갖춘 스페인의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EU 1위의 경제대국인 독일의 사정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2009년 경기침체 중 -4.7%의 경기침체를 거쳤으나 유로지역에서 가장 먼저 경기반등을 시작하여 2010년에는 통일 이후 최고 수준인 3.6%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2011년에도 독일 경제는 2.6%의 성장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경제의 선전은 경기침체 직후의 반등 효과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독일은 EU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글로벌 경제위기 중에도 실업률이 감소하였고, 제조업 부문의 강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외교역 흑자를 실현함과 동시에 내수와 투자도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경제 전망도 밝다. EU 집행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독일의 내수가 1% 증가하면 EU 역내 무역망을 통해 EU 회원국의 GDP가 0.6~0.7% 증가

★ 독일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단위: %)

구분	1992~199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GDP ¹⁾	1.5	2.7	1.0	-4.7	3.6	2.6	1.9
민간소비 ¹⁾	1.3	-0.2	0.7	-0.2	0.4	1.2	1.5
공공지출 ¹⁾	1.3	1.6	2.3	2.9	2.3	1.5	0.9
총 고정투자 ¹⁾	0.9	4.7	2.5	-10.1	6.0	6.0	4.8
실업률	8.6	8.7	7.5	7.8	7.1	6.4	6.0
인플레이션 ¹⁾	-	2.3	2.8	0.2	1.2	2.6	2.0
무역수지 ¹⁾	4.2	8.2	7.3	5.6	6.1	5.8	5.7
경상수지 ¹⁾	0.8	7.6	6.7	5.0	5.1	4.7	4.6
재정수지 ²⁾	-2.6	0.3	0.1	-3.0	-3.3	-2.0	-1.2
국가채무 ²⁾	58.3	64.9	66.3	73.5	83.2	82.4	81.1

주: 1) 전년 대비 증가율

2) GDP 대비 비율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1), European Economic Forecast.

★ 그리스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단위: %)

구분	1992~199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GDP ¹⁾	3.0	4.3	1.0	-2.0	-4.5	-3.5	1.1
민간소비 ¹⁾	3.1	2.8	3.2	-2.2	-4.5	-6.4	-2.2
공공지출 ¹⁾	3.1	8.2	1.5	10.3	-6.5	-2.6	0.1
총 고정투자 ¹⁾	4.3	5.5	-7.5	-11.2	-16.5	-16.6	-1.9
실업률	9.9	8.3	7.7	9.5	12.6	15.2	15.3
인플레이션 ¹⁾	-	3.0	4.2	1.3	4.7	2.4	0.5
무역수지 ¹⁾	-15.2	-19.5	-20.4	-16.3	-14.2	-13.0	-12.3
경상수지 ¹⁾	-6.3	-15.6	-16.3	-14.0	-11.8	-8.3	-6.1
재정수지 ²⁾	-6.5	-6.4	-9.8	-15.4	-10.5	-9.5	-9.3
국가채무 ²⁾	97.7	105.4	110.7	127.1	142.8	157.7	166.1

주: 1) 전년 대비 증가율

2) GDP 대비 비율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1), European Economic Forecast.

하는 것으로 나타나 독일이 EU 전체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¹⁾

독일이 주도한 유럽 경제통합

유럽의 통합과정에서 프랑스의 정치적 영향력이 돋보였다면, 경제통합에서는 EU 전체 경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독일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특히 통화공동체 형성에서 독일이 갖는 위상은 더욱 컸다.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럽통화 통합의 역사는 각국의 통화가 독일 마르크화를 중심으로 집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정도로 독일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큰 경제규모와 함께 안정적인 환율과 낮은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흑자, 다원화된 경제구조를 갖춘 독일은 유럽의 통화통합을 위한 중심 틀을 제공하였고, 통합과정에서 각국의 인플레이션과 금리는 독일 수준으로 수렴되었다. 1998년에 출범한 유럽중앙은행(ECB)은 독일연방은행(Bundesbank)의 통화정책 방향을 그대로 반영하여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²⁾

전후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의 쓰라린 경험을 겪은 독일은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는 거시경제정책을 펼쳐왔으며 전통적으로 준칙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선호한다. 이러한 독일의 입장은 통합과정에서 정치적 합의를 강조하는 프랑스의 입장과 자주 충돌하였다. 최근의 대표적인 예로는 유로화 사용국으로 구성된 '경제운영기구(economic government)'에 관한 논의를 들 수 있다.

2008년 10월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지역만의 독자적인 경제운영기구를 설립하여 유로화 사용국의 경제정책 운영을 보다 '공동화'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는 이 제안이 EU 국가들을 유로화 사용국인 '1등 국가'와 비(非)유로 사용국인 '2등 국가'로 나누게 한다면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로 다른 의견의 배경에는 정치적 합의에 따른 운영을 중시하는 프랑스의 입장과 엄격한 준칙을 기반으로 거시경제정책을 운영하려는 독일의 줄다리기가 자리 잡고 있다. 독일정부의 입장은 정치적 요구에 의해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 같은 유로지역 내의 재정준칙이 재량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으며, 재량적 운영 자체가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기침체가 끝나기도 전에 독일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인 800억 유로의 재정 감축안을 발표하였고, 이와 함께 '재정수지 건전화법'을 제정하였다.³⁾ 재정적자의 상한선을 수치화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 법은 EU 차원의 SGP를 유로지역 회원국 중에서는 최초로 법제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칙을 강조하는 독일의 입장은

재정위기 대처과정에서도 나타남

이처럼 정치적 타협보다는 준칙을 강조하는 독일의 입장은 현재 유로지역 재정위기 대처과정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조치에 IMF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구제금융 논의가 막바지로 치닫던 2010년 3월 초까지도 IMF를 통한 구제금융은 가능성이 제일 낮다고 예상되었다. 프랑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은 금융권 불안 해소를 위해 가능한 빠른 구제금융을 요구하였고 EU 차원의 해결책을 선호하였다. 이에 반해 독일은 엄격한 구제금융 조건의

³ 재정건전화법(Schuldenbremse; debt brake)은 2015년부터 연방정부는 GDP 대비 0.35% 이내로 구조적(적자 중 경기변동에 의한 부분과 일회성 지출을 제외한 부분)을 맞추고, 주정부는 2019년부터 재정균형을 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자연재해나 극심한 불경기 같은 긴급상황 시에는 재정적자의 초과가 가능하지만 이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호혜성 재정지출의 여지를 가능한 줄인 것이 특징이다.

¹ European Commission (2010),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0.

² 유럽중앙은행은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독립되어 물가안정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독일연방중앙은행과 똑같이 2%를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다.



부과와 함께 IMF와의 병행지원을 주장하였다. EU 정상회의 직전 막판 협상을 통해 독일은 IMF와의 공동 구제금융안을 관철시켰고, 프랑스 등 라틴계 국가들이 주장하던 저금리 지원 대신에 가능한 시장금리에 근접한 지원 조건을 이끌어냈다.⁴

독일이 IMF를 통한 구제금융을 주장한 이유는 그리스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고, 구제금융이 재정통합(fiscal union)을 향한 첫 단계가 결코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전후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독일 국민의 60% 이상이 EU의 그리스 재정지원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독일정부로서는 가능한 엄격한 구제금융 조건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독일 정치권은 구제금융 실시와 동시에 민간채권자의 손실부담을 요구하는 이른바 ‘질서 있는 파산(orderly insolvency procedure)’을 동시에 거론하는 이중적인 입장을 보였다.⁵

★ 독일과 프랑스의 유로지역 경제정책 입장 차이

구분	독일	프랑스
그리스 구제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리스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엄격한 구제금융 조건 부과 •EU와 IMF 공동 차원의 구제금융 주장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권 불안 해소를 위해 조속한 구제금융 지원⁷ •가능한 EU 내에서 구제금융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
유로지역 경제운영 (economic gover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27개국 전체 차원의 협의를 선호, 개별 국가의 책임 강조 •개별 회원국의 거시경제 운영원칙 준수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로화 사용국으로 이루어진 상설 경제운영기구 (economic government)를 설립하여 유로지역 차원의 공동 경제운영을 강화
재정건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축재정의 필요성 강조 •2010년 6월 8일 800억 유로 규모의 재정감축안 (2014년까지)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국의 재정긴축이 유럽의 경기침체를 가져올 가능성을 우려 •2010년 6월 12일 향후 3년간 450억 유로 규모의 재정감축안 발표

자료: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독일은 무조건적인 재정지원 반대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를 EU 차원에서 부담할 수 없다는 독일의 입장은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제공 직전에 보다 명확하게 나타났다. 메르켈 총리는 2010년 10월 말 EU 정상회의에서 채무조정 도입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채무상황이 어려울 경우 채권자와 납세자가 공동으로 고통을 부담한다는 것이 채무조정의 취지이지만, 이 주장에는 재정지원 시 독일의 부담이 제일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이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의 재원 마련 과정에서 국민의 반대여론을 의식한 독일 정치권은 납세자 부담으로 일부 국가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ECB를 통해 화폐화(monetization) 조치를 취하는 방안에는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⁸

2011년 4월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 이후 유로지역 재정위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그리스 채무조정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010년 5월 이후 IMF와 EU는 총 4차례에 걸쳐 525억 유로를 그리스 정부에 지원하였으나, 그리스의 자체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한 채무수준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라 독일정부는 채무조정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⁴ 결과적으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은 유로지역 회원국과 IMF가 2.5대 1의 비율로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독일은 6~6.5% 수준의 금리로 차관을 제공하자고 주장한 데 비해, 프랑스는 4~4.5%의 비교적 낮은 금리를 주장하였는데 최종 금리는 5%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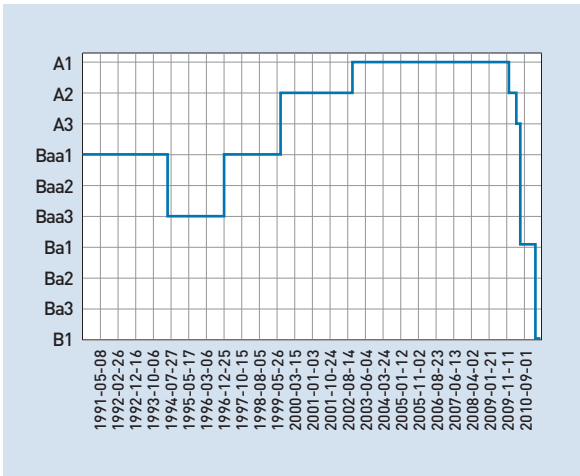
⁵ 이 주장은 유럽통화기금(EMF: European Monetary Fund) 구상을 제시한 도이치 은행의 토마스 마이어가 2010년 2월에 제기하였는데, 5월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비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질서 있는 파산’은 채무국의 은행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부분적인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 것을 의미한다.

⁶ 독일은 그리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IMF를 구제금융에 끌어들이기를 희망하였으며, 구제금융 제공에도 호혜금리(4% 수준, 프랑스가 주장) 대신 그리스 국채의 시장금리(6~6.5%)를 적용하자고 주장하였다.

⁷ 유럽 국가 중 프랑스 은행권의 그리스 외채에 대한 익스포저(exposure)가 제일 높은 수준

⁸ 화폐화는 정부지출을 목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이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하여 재정적자를 충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ECB를 통한 화폐화로는 ECB가 회원국의 국채를 다량으로 매입하거나 유로지역의 공통채권(eurobond)을 발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회원국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ECB를 통한 회원국 국가채무의 화폐화는 EU 조약(125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 그리스의 신용등급 변화(무디스)



자료: 국제금융센터

2011년 5월 17일 유로지역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독일의 반대로 그리스에 대한 추가지원이 무산되었고, 이에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3단계나 강등하였다. 독일은 그리스의 채무를 축소하거나 채권만기 연장을 통해 그리스의 채무수준을 줄여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반해, ECB를 비롯한 유로그룹(Eurogroup)은 공식적으로 채무조정을 언급하는 순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질 수 있다며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였다. 일례로 올리 렌 EU 경제·통화 집행위원은 5월 말 국채만기 연장을 통한 채무조정 방안을 거론하자, 6월 1일 무디스는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정크본드 수준인 Caa로 3단계 강등시키는 조치를 취해 그리스 채무조정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현재로서는 독일정부가 채무조정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여 그리스에 대한 잔여지원(570억 유로)과 더불어 추가적인 지원을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독일은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을 것으로 예상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유로지역 재정위기 국가에 대한 지원방안은 최대 ‘물주’라 할 수 있는 독일과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건전한 북유럽 국가들이 한편을

이루고, 남유럽 국가와 EU 통합론자들이 다른 한편을 이루어 줄다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안되고 있다. 양쪽 중 한쪽으로의 쏠림 현상에 대해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향후 전개과정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독일정부는 재정위기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

현재 독일정부의 정치적 입지로 미루어볼 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기민당(CDU) 주도의 연립정부는 2010년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방침을 밝힌 직후에 치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선거에서 패배하였고, 2011년 3월 27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선거에서도 녹색당과 사회당(SPD) 연합에 패해 58년 만에 주의회 다수석을 내놓았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정부는 노후 원전의 전면 철폐라는 강수를 두어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였지만 이러한 강경조치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패배한 사실에서 독일정부의 작아진 입지를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독일은 유로지역의 재정위기를 방관할 수 있을까? 현재 독일의 낙관적인 거시지표를 살펴보면 그리스 재정위기는 독일과 별 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유로지역의 재정위기는 큰 파급효과(spill-over)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 유로화 도입은 유럽 금융시장의 통합을 가속화시켜 결과적으로 유로지역 은행 간의 상호 채무관계를 강화시켰다. 현재 2,840억 유로인 그리스 국채의 54%를 유로지역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어 그리스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면 유로지역 은행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둘째, 독일은 유로화 사용의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에 유로지역의 존속은 독일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1990년대 통일 후유증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던 독일이 막대한 경상수지를 축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유로화 사용으로 인한 편익과 EU의 확대가 있었다. 독일이 마르크화를 계속 사용하였다면 경상수지 흑자의 증가는 마르크화 절상으로 이어져 현재와 같은 수출 증가로 인한 경기회복

을 누리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동유럽으로부터 저가제품의 유입이 없었다면 독일은 물가안정 달성에도 차질을 빚어 결국 성장과 사회 화합에 필요한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갖추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유로지역의 존속은 독일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유로지역의 존립을 위해서 독일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나설 수밖에 없다.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이 없다면 재정통합(fiscal union)은 있을 수 없다”라는 확고한

입장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정부는 이번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EU 전체 경제운영 원칙을 재확립하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유로지역 재정위기 해결과정에서 독일은 채찍인 ‘구조조정 및 경제개혁 요구’와 당근이라 할 수 있는 ‘재정통합’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끌고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EU 통합을 위협하는 유럽의 극우정당

Far right politics in Europethreatens integration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egan, far right politicians have been gaining popularity and this trend should not go unheeded. Along with extreme right politicians exerting strong influence in middle-eastern Europe, the far right politics has also made a rapid progress in northern Europe where the tendency for liberalism is strong. Above all, the recent expansion is worrying as it is not confined to few extremists but rather it has gained a broad appeal, coinciding with events such as a sudden surge of immigrants and financial crisis. Moreover, the far right parties have gained legitimacy as many entered the parliament with the backing of the public and participated in various coalition governments while taking initiatives in several policies. This trend is likely to continue in the future and the far right politicians are expected to make significant progress in EU member countries such as in Ireland, Spain, and France where general elections and presidential elections are slated to take place. It is worrisome as it will not only undermine the integration process of the EU whose core values are based on open-door policies and democratic tradition, but also exacerbate the financial crisis in Europe. It is to be seen how the EU will cope with strengthening nationalism and opposing arguments for further integration.

유럽 정치에 부는 우경화 바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극우세력의 약진이 심상치 않다. 극우정당의 입김이 전통적으로 강한 중동부 유럽은 물론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성향이 강한 북유럽에서조차 약진이 두드러지는 등 지지세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무엇보다도 최근의 성장세가 일부 소수 극단주의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민자 급증, 경제위기 등과 맞물리면서 대중적인 공감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극우정당은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회에 진출하고 연립정부에 참여함으로써 각종 정책을 주도하는 등 양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도우파 정당조차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극우정당과 손을 잡거나 그들의 정책을 지지하는 현상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총선 및 대선이 예정된 아일랜드,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도 극우파의 약진이 예상된다. 이는 개방주의와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EU의 통합을 저해시킬 뿐 아니라 유럽 재정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럽 전 지역에서 극우정당이 약진

① 동유럽: 전통적으로 극우정당이 강세
전통적으로 극우정당은 중동부 유럽에서 강세였다. 이는 중동부지역의 체제 변화와 역사적 특수성에서

★ 유럽 내 극우정당의 득표율

국가	정당	선거	득표율
노르웨이	진보당	2009년 총선	22.9%
핀란드	진짜핀란드인당	2011년 총선	19.0%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자유당 미래를 위한 연합	2008년 총선	18.0% 11.0%
네덜란드	자유당	2010년 총선	15.5%
덴마크	덴마크인민당	2007년 총선	13.9%
헝가리	요빅당	2010년 총선	12.2%
이탈리아	이탈리아북부동맹	2008년 총선	8.3%
스웨덴	스웨덴민주당	2010년 총선	5.7%

기인한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서유럽과는 달리 전체적 통치체제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으며, 국가의 ‘정체성’을 이루는 민족과 영토 개념을 중시한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특히 체제 전환을 거치면서 개방에 대해 생긴 반감도 1990년대 말 이후 극우정당이 득세하는 데 일조하였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헝가리다. 헝가리의 경우, 반집시·반유대인 정책을 내건 ‘요빅(Jobbik, 더 나은 헝가리 운동)’당이 2010년 4월 총선에서 47석을 확보해 첫 의회 진출에 성공하였다. 일약 3당으로 부상한 것이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67%가 유대인들이 경제 분야에서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요빅

당은 극우단체인 ‘헝가리 수호대(Hungarian Guard)’와 함께 ‘집시 범죄 소탕 운동’까지 벌였던 경험이 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라트비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서도 일부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2010년 4월에 있었던 오스트리아 대선에서는 친(親)나치 색채를 보이는 자유당¹의 바바라 로젠크란츠 후보가 15%를 얻어 2위를 차지하였다. 로젠크란츠는 홀로코스트 금지에 반대하고, 이슬람사원 침탈 건축 금지, 불법 이민자 축출 등을 주장하여 높은 지지를 얻었다. 최근 오스트리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노동시장 개방으로 외국인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였고,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45%는 일자리를 빼앗길까 걱정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빈 시의회 선거에서도 자유당이 27.1%의 득표율을 획득하는 등 지지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② 북유럽: 금융위기 이후 극우정당 초강세
개방성과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것으로 자부하던 북유럽에서 극우세력의 약진은 유럽 정치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2011년 치러진 핀란드 총선에서 반이민, 반외국인, 반EU를 주장하는 극우정당 진짜핀란드인이 19.0%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2007년 총선 당시(4.1%)보다 5배 가까이 높은 득표율로, 국민연합당(중도우파)과 사민당(중도좌파)에 조금 뒤진 3위에 해당한다. 핀란드는 줄곧 국민연합당, 사민당, 중도당 등 3개 주류 정당이 짝을 이뤄 집권하고 나머지 1개 정당이 야당이 되는 패턴이 유지됐으나 이번 총선을 통해 구도가 깨졌고, 중도당은 4위로 추락했다.

다른 북유럽 국가에서도 극우정당의 약진이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2010년 9월 스웨덴 총선에서는 반이민, 반유대주의를 앞세운 스웨덴민주당(SD)이 5.7%

의 득표율로 창당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하였다.² 2007년 덴마크 총선에서는 덴마크인민당이 13.9%의 득표율을 얻었는데, 2011년에 실시되는 총선에서는 이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③ 서유럽: 극우정당이 스스로 대안 세력화
서유럽 극우세력은 다문화주의와 이슬람 공격에 초점을 맞추며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하이브리드 극우세력’으로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다. 극단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 대신 법 테두리 안에서 여론을 잠식해가고 있다. 즉 세계화된 금융자본의 헤게모니가 몰락한 상황에서 극우파가 스스로를 정치 및 경제 이념의 대안 세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2010년 6월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정당인 자유당은 15.5%를 획득하면서 일약 3당으로 떠올랐고, 이후 집권연정을 통해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였다. ‘관용의 나라’였던 네덜란드에서도 반이슬람 정당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 ‘북부동맹’도 2008년 총선에서 8.3%를 득표한 뒤 연정에 참여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다.

유럽에서 거의 유일하게 극우정당이 힘을 쓰지 못하는 독일에서마저 극우세력이 대두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과거 독일에서는 비례대표 득표율이 5% 이상 또는 지역구에서 3명 이상의 당선자를 내지 않은 당은 의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극우정당이 연방 의회에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낮았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반이슬람 정당에 대한 지지가 20%에 달해 의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상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선을 1년여 앞둔 가운데 극우파가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저성장, 고실업, 재정난 등 3중고에 직면해 있을

뿐 아니라 2010년 연금개혁으로 지지율이 추락하였고, 사회당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뉴욕에서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장마리 르펜 대표가 부각되고 있다. 『르몽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르펜 대표의 지지율은 36%에 이른 반면,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율은 15%에 그쳤다. 르펜은 경제난의 원인을 EU 통합과 이민자들에게 돌림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확대하고 있다.

유럽 극우정당 약진의 파급효과

현재 유럽의 극우정당은 유럽의 가치를 지킨다는 명분을 앞세워 증오를 자극함으로써 과거에는 자제했던 발언을 과감하게 던지고 있다. 실제로 극우정당은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이민자와 외국인에 대한 반감, EU 통합 반대를 공공연히 주장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유럽에서 극우정당과 그 지지자들을 뭉치게 하는 힘의 이면에는 이민자와 EU 통합에 대한 피해 의식과 이를 거부하려는 충동이 깊게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극우정당이 약진함으로써 발생하는 파급효과는 무엇일까?

① 민족·종교 갈등 증폭

반이슬람, 인종주의 정책의 도입으로 민족과 연계된 종교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의회가 부르카와 니캅 착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탈리아와 스위스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을 추진 중이다. 2010년 9월 오사마 빈라덴은 “무슬림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당신들의 권리라면 침략자들을 쫓아내고 살해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닌가?”라고 경고하였고, 실제로 2010년 12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더욱 위협적인 것은 유럽 내에서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테러가 낳은 반이슬람 정책이 다시 테러 위협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다는 증거다.

② 재정위기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

극우정당의 부상은 남유럽 재정위기의 해결책 모색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일례로 2011년 4월 핀란드 총선에서 부상한 진짜핀란드인당이 의회³에서 포르투갈 구제금융에 반대하여 전 세계 금융시장을 긴장시켰다. 핀란드는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4,400억 유로 중 80억 유로를 담당하고 있는데, 만약 핀란드를 제외한 채 구제금융 지원이 시행되면 나머지 국가들이 부족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핵심 국가에서 반대여론이 높아지면서 구제금융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제1당인 국민연합당과 제2당인 사회민주당이 구제금융 제공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진짜핀란드인당이 연합정부 구성에 빠지면서 사태가 수습되기는 하였으나, 유로화 수호를 위해 모든 일을 하겠다던 유로지역의 약속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향후 그리스의 추가 금융지원, 채무재조정 등 재정 취약국들의 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될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핀란드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 세계 금융시장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EU의 통합정신을 위협

궁극적으로는 EU 통합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민족과 국가를 신성시하는 극우정당은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EU의 통합정신조차 위협하고 있다. 이들은 EU 탈퇴를 주장하거나 EU의 간섭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한다. EU 역내 자유로운 이동 보장과 EU 확대에 따른 동유럽 이민자의 대거 유입 등에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다.

일례로 EU는 통합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통행 자유화 협정인 쉥겐 조약의 수정에 나설 전망이다. 쉥겐 조약은 1985년 유럽 각국이 공통 출입국 관리 정

¹ 2008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유당의 전 대표 외르크 하이더는 나치와 히틀러를 찬양하고 유대인 멸시 발언과 외국인 이민 반대로 국제적인 물의를 일으켰다.

² 스웨덴 총선에서 득표율 4%는 의석 획득의 최소 조건이다.

³ EFSF를 통한 유로지역 지원은 회원국 전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핀란드는 다른 유로지역 국가와 달리 정부가 아닌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책을 사용하여 국가 간 통행에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을 담은 조약이다. 당시 아일랜드와 영국을 제외한 EU 가입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를 비롯한 비EU 가입국 등 총 25개국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쉥겐 조약은 유럽인들의 비자 없는 자유로운 여행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국경 없는 유럽의 탄생에 밑바탕이 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최근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은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강화하였다.

이탈리아가 난민들에게 임시 교부증을 발부해준 뒤 이들을 프랑스로 넘기자, 프랑스는 국경을 막고 난민들을 돌려보내고 있다. 덴마크는 “동유럽에서 넘어오는 범죄자들을 막겠다”며 국경검문소를 설치하여 무작위 검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특수한 상황에서 국경 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아가 프랑스 대선후보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국민전선 당수 르펜은 대통령이 되면 유로화를 6개월 내에 폐기하고 프랑화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 경우 EU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들 가능성도 있다.

유럽 극우세력의 확산을 경계할 필요

금융위기 직후 유럽에서 극우정당이 득세하자 경기침체와 EU 통합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 이상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었다. 즉 현재의 사회질서나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극우정당의 약진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기에 이어 재정위기가 겹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극우정당은 스스로를 정치 및 경제 이념의 대안 세력으로 만들어 대중의 공감을 광범위하게 얻고 있다. 최근 약진하고 있는 유럽의 극우정당은 전통적인 파시즘과 거리를 두는 신흥 ‘하이브리드’ 세력으로서 국민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가고 있고,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실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되었다.

1957년 로마 조약 체결로 시작된 EU의 통합은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길을 걸으며 지역 통합의 모범 사례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제 경기침체 장기화라는 악조건 속에 ‘극우세력과의 경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증가하는 민족주의 요구와 EU 통합 반대 논리에 대해 향후 EU가 어떻게 대처하며 지역통합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갈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국의 대EU 수출구조와 FTA 활용방안

Korea's export structure to the EU and application of the FTA

In late 2009, South Korea and the EU agreed to put the FTA into effect after 26 months of tough negotiations. As it will come into effect in July, 2011 it is time to prepare and find ways to utilise the free trade agreement. Korea currently faces four major problems which block it from maximising the benefits from this pact. The first problem is that the EU's significance as an export market is declining. As a result, Korea's market share in the EU has been stagnant at between 2 to 3%. The second problem is that the number of goods in which Korea has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EU market is on a decline. The next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Korea's export pattern is shifting within the region. The share of Korea's exports to Western Europe is sharply decreasing and this is because Korea's main exports to the EU are moving from finished goods to intermediate materials and components. Finally, Korea's exports to the EU are highly concentrated in terms of types of goods compared to its exports to other major trading partners.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FTA, which is the EU's first trade pact with an Asian country, Korea needs to revise its trade and industrial strategies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한-EU FTA의 기대효과

2007년 5월에 협상을 시작한 한-EU FTA가 그동안 총 8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년 2개월 만에 최종 타결되었다. 협상과정에서 상품양허(관세인하), 원산지 규정, 서비스시장 개방, 자동차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어 협상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되었다.

2009년 10월 한-EU FTA 협정문에 가서명한 이후 2010년 10월 양국 정상 간에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고, 2011년 2월 유럽의회가 먼저 한-EU FTA를 승인하였다. 유럽 자동차업체의 반발로 유럽회의의 비준은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었으나 압도적인 표차(찬성 495표, 반대 16표, 기권 75표)로 통과되었다. 2011년 5월 4일에는 한국 국회도 FTA 비준안을 승인하였다.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되는 한-EU FTA는 EU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라는 데 의미가 있다. 한-EU FTA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한-EU FTA를 통해 EU와 경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EU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EU 시장에서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고 유럽기업의 대한국 투자가 촉진될 것이다. 투명성, 신뢰성, 개방성 제고를 통한 한국경제 시스템의 선진화도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FTA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상품양허

분야에서 폭넓게 관세인하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대EU 무역이 연간 46.5억 달러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EU FTA로 인해 한국의 대EU 수출은 연간 25.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EU 수입은 연간 21.3억 달러 증가가 예상된다. EU의 수입관세(전체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5.6%)가 최대 5년 내에 모두 철폐될 경우 무역 창출 및 무역 전환 효과도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기대효과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FTA는 자동차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깔아놓은 '고속도로'와 같다. 경제주체인 기업이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따라서 한-EU FTA 발효에 대비하여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의 대EU 수출구조의 문제점

한국의 대EU 수출구조를 분석한 결과, 현재 상태로는 한-EU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❶ 한국의 EU 시장점유율 정체

첫 번째 문제는 수출시장으로서 EU의 중요성이 줄어들면서 EU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다. 2010년 기준으로 EU는 한국의 제2위 수출시장(대EU 수출: 535억 달러)이지만, 제1위 수출





★ 주요국의 EU 시장점유율 비교

(단위: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한국	2.5	2.7	2.6
중국	15.8	17.8	18.9
미국	11.9	13.2	11.4
일본	4.8	4.7	4.3

주: 시장점유율은 EU 전체 역외수입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European Commission DB

시장인 중국(대중국 수출: 1,168.4억 달러)과는 커다란 격차가 있다. 더군다나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의 수출 시장 가운데 EU의 비중이 줄어들고 국가별 순위에서도 EU 국가들이 신흥국에 밀리는 양상이다. 대EU 수출 비중은 2005년 한때 15.4%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면서 2010년에는 비중이 11.5%로 하락하였다.

2001년 독일(6위)과 영국(8위)이 10대 수출시장에 포함되었으나, 2010년에는 인도(7위), 베트남(9위)의 약진으로 영국이 10위권 밖(18위)으로 밀려났다. 이는 한국기업이 2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략도 까다로운 EU 시장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국 시장을 공략하는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EU 시장점유율은 3%의 벽을 넘지 못한 채 2%대 후반에서 정체되어 있고(한국은 EU의 제8위 수입국), 일본도 EU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저가 공세를 앞세운 중국은 시장점유율이 20%에 육박하고, 미국도 10% 이상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② EU 시장에서 경쟁우위 품목 수 감소

두 번째 문제는 EU시장에서 경쟁우위 품목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EU 시장에서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품목은 감소 추세다. 대EU 수출품목 중 현시비교우위(RCA)지수가 1 이상인 품목(HS 2단위 기준, 총 96개 품목)은 2001년 17개에서 2010년 13개로 감소한 데 반해, 중국(35개), 미국(26개), 일본(18개)

★ 주요국의 대EU 비교우위 품목 수

(단위: 개)

구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2001년	17	29	35	15
2005년	14	27	33	15
2008년	14	28	36	16
2010년	13	26	35	18

주: 1) RCA지수가 1 이상인 품목 수
2) HS 2단위 기준

자료: ITC, Trade Statistics.

등 주요 경쟁국들은 한국보다 훨씬 많은 비교우위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③ 동유럽에서 중간재를 가공하는 수출 패턴

한국의 대EU 수출은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서유럽은 동유럽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지만 소득수준이 높아 EU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비시장이다. 서유럽 15개국이 EU 전체 GDP의 87.8%, 역외수입의 91%를 차지한다. 하지만 한국의 대EU 수출에서 서유럽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92.4%에서 2006년 82.1%, 2008년 74%, 2010년 70%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경쟁국인 미국과 중국의 서유럽 수출 비중이 90% 이상이고, 일본도 70%대 후반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주력 시장인 서유럽 수출의 비중 감소는 한국제품의 EU 시장점유율 정체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서유럽 수출에 비해 동유럽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다. EU에 신규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이 물류 측면에서의 지리적 이점과 저임금 인력을 바탕으로 서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생산기지로 부상하자,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제조업체는 동유럽 투자에 나서 현지 생산체제를 구축하였다. 전기전자 업체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유럽 내 생산거점을 동유럽으로 이전하였고, 자동차 업체들은 동유럽에 신규 생산거점을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EU 수출 패턴이 점차 '완제품-서유럽 수출'에서 동유럽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에 사용할 중간재와 부품을 중

★ 컬러 TV와 승용차의 대EU 수출 패턴 변화

(단위: 백만 달러)

품목	구분	2001년	2003년	2006년	2008년	2010년
컬러 TV	완성품(14%)	238	767	1,790	1,442	1,220
	평판디스플레이(3.7%)	75	203	3,125	3,921	5,411
승용차	완성품(10%)	2,483	4,166	9,063	5,220	3,312
	자동차 부품(4.5%)	244	375	988	2,398	3,115

주: 1) MTI 4단위 기준
2) () 안은 EU의 수입관세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KITA.net.

국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국내에서 조달하는 '중간재 및 부품-동유럽 수출'로 전환되었다. 문제는 수입관세율이 높은 완제품 수출 대신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간재와 부품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FTA의 관세인하 혜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④ 소수 품목에 집중

네 번째 문제는 한국의 대EU 수출에서 소수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이다. EU 시장에서의 주력 수출품목 비중(2010년 기준)을 보면 10대 품목은 65.9%, 20대 품목은 75.9%, 50대 품목은 85.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중화학제품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져 대EU 수출의 저변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의미한다. 대EU 수출의 10대 품목의존도는 대미국 수출(59.5%), 대중국 수출(52%)은 물론 한국의 전체 수출(50.7%)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는 중소 수출기업의 EU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미국이나 중국 시장에 비해 낮음을 의미한다.

또한 경쟁국과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소수 품목에 대한 의존도는 지나치게 높다. 주력 수출품목의 비중(2010년)을 비교해보면, 한국 65.9%, 미국 35.4%, 중국 36.4%, 일본 38.4%다. 이는 한국 수출상품 구조의 다양성이 미흡하고 수출산업의 저변이 약해 한-EU FTA의 폭넓은 관세인하 혜택을 누릴 수 없음을 의미한다.

★ 주요국의 대EU 주력 수출품목 의존도(2010년)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10대 품목	65.9	35.4	36.4	38.4
20대 품목	75.9	47.2	49.1	49.6
50대 품목	85.9	62.4	64.8	70.3

주: 1) 전체 수출액 대비 누적 비중
2) HS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KITA.net.

FTA 활용방안

EU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EU와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누릴 수 있는 시장 선점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EU와 아시아 국가들 간의 FTA 협상 속도를 고려하면 한국은 최소 3년 이상 시장선점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은 FTA 발효와 더불어 대EU 수출 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EU FTA를 활용할 경우, 산술적으로 한국의 EU 시장점유율은 현재의 2.6%에서 2016년 2.9%, 2020년에는 3.0% 이상까지 상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EU FTA 활용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한-EU FTA 발효에 맞춰 대응체제를 점검해야 한다. 한국 수출기업은 우선 한-EU FTA 발효 이전에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 시 인증자에 한해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이 허용되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여 FTA가 발효되면 즉시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둘째, 한국 수출기업은 수입국 검증 당국이 사후에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것에 대비하여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U는 한-EU FTA 발효 이후 중국산 제품이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한국산으로 둔갑해 대거 EU로 수출될까 우려하고 있고, 만약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세 추징과 벌금 부과는 물론 징역형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셋째, EU품목분류(CN)와 한국품목분류(HS) 체계의 차이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EU 진출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EU 무역 환경의 변화는 한국 입장에서는 EU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선 FTA 관세 인하로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면 한국기업은 관세 인하만큼 판매가격을 인하하거나 마케팅 활동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EU 수출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매년 무역흑자가 확대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EU의 통상정책 변화도 EU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EU는 중국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2014년부터는 GSP(일반특혜관세) 수혜대상에서 중국과 BRICs 국가를 제외할 방침이다.

이처럼 유리한 무역환경을 바탕으로 한국의 수출 대기업은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력으로 서유럽 시장 공략을 강화해야 한다.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제품을 차별화하고 활발한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벌여 원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미국, 일본 사이에서 닛크래커(nutcracker)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 나아가 녹색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 유망 사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특히 EU의 녹색기술과 한국의 IT 및 제조 기술을 접목하는 산업협력을 통해 그린비즈니스 제품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소수 대기업형 품목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중소기업형 수출제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수출제품의 다양화 없이는 한-EU FTA의 폭넓은 관세인하 혜택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 트렌드를 수시

로 파악해 국가별로 유망 수출품목을 발굴하고, 유럽의 대형 유통업체가 글로벌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이 EU의 공공구매시장이나 프라이빗 브랜드(PB)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9년부터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을 벌여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수출기업을 선정하여 우대금리 적용, 수수료 감면, 대출한도 확대 등의 혜택과 함께 기술개발 자금, 해외시장 개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지원대상 기업이 12개에 불과한데 점차 대상 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품종 소량 주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체제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KOTRA는 현재 유럽에 공동물류센터 4곳과 공동 AS센터 1곳을 운영 중이다.

한편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한국을 대EU 수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외국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특히 EU 시장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기업이 안정적인 생산기지 확보를 위해 한국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EU와 일본은 EPA(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개시하는 데 합의하였으나, 협정 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국내로 유턴하려는 기업의 정착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한-EU FTA 비준 이후 관세장벽 회피(tariff-jumping) 목적의 해외투자가 불필요해졌고, FTA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려면 원산지 규정의 영역 요건(국내 가공 및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한국 기업의 국내 유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U 주요국의 정책 변화로 타격을 입은 원전산업

EU nuclear power industry after Fukushima disaster

The EU is divided over the future of nuclear power following the Fukushima disaster in Japan. Countries which were previously strongly opposed to the use of nuclear power began to consider expanding the proportion of nuclear in their energy mix. Also, the EU more than doubled its allocations to the nuclear energy research in the FP7 compared to previous periods. However, this has all changed after an earthquake in Japan led to a partial meltdown at the Fukushima nuclear plant. It has triggered a sharp increase in worry about the safety of nuclear power and rapidly shifted the EU's political terrain. Germany and Italy have ended their pro-nuclear energy policies and they are discussing when and how to end the use of nuclear power. On the other hand, countries such as the U.K. and France are staying firm on their decision to expand their capacity and the reactions from the public have been somewhat limited. While the viability of ending the use of nuclear power is being discussed in Europe, EU members are now planning to carry out nuclear stress tests to assess whether their nuclear plants are capable of withstanding unexpected events and whether their safety procedures are sufficient enoug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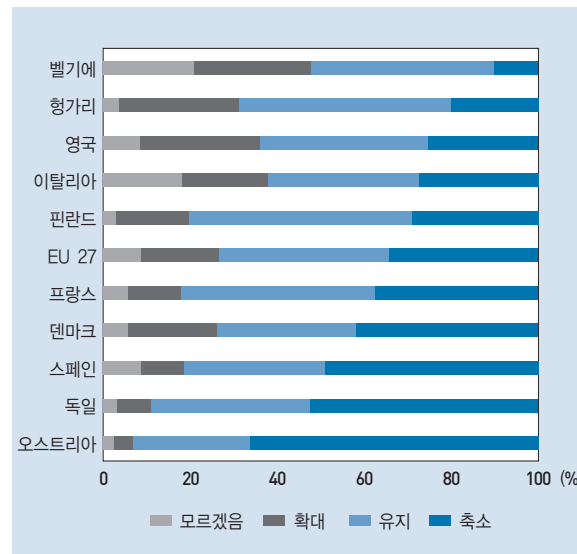
2000년대에 시작된 EU 원전 르네상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주요 EU 국가들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었다. 체르노빌 사태 이후 20여 년 동안 대형 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되었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원전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스분쟁으로 유럽에 수차례 가스공급이 중단되었고,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 폭등도 원자력이 차세대 대체에너지로 각광받는 데 일조했다.

EU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은 회원국마다 상이하다. 그러나 원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국가들도 2000년대 이후 원전 정책을 수정해나가며 원자력 비중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원자력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독일에서는 체르노빌 사태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을 모두 중단했고, 2021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시키는 법안(Nuclear Exit Law)이 2000년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보수 연립정부는 원전 12기의 가동시한을 평균 12년 연장시키는 법안을 추진해 2010년 10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2008년 5월에는 G8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가동 중인 원전을 보유하고

★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EU의 인식

질문: 원자력 에너지 비중을 확대, 유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0), Europeans and Nuclear Safety (Special Eurobarometer Report 324).

지 않은 이탈리아 정부도 2013년부터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관련 법안이 2009년 7월에 통과되었다.

반대여론이 비교적 약한 EU 국가에서는 원자력 확대정책이 더욱 과감하게 진행되었다. 2008년에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는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줄이기





★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원자력 에너지 관련 R&D 예산 (단위: 억 유로)

구분	기간	핵융합	핵분열	공동 연구센터	예산
FP4	1994~1998년	7.94	1.70	2.71	12.35
FP5	1998~2002년	7.88	1.91	2.81	12.60
FP6	2002~2006년	8.24	2.09	3.19	13.52
FP7	2007~2011년	19.47	2.87	5.17	27.51

자료: 유럽 에너지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http://ec.europa.eu/energy/nuclear/research_en.htm)

위해 향후 15년 동안 최소 8기의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U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원전산업의 선두주자인 프랑스는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를 환영하며 여러 국가들과 원자력과 관련된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었다.

최근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EU의 원자력 기술분야 R&D 예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제4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¹부터 제6차까지는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의 R&D 예산이 약 12억~13억 유로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7년부터 시작된 제7차 FP의 원전 관련 예산은 27.5억 유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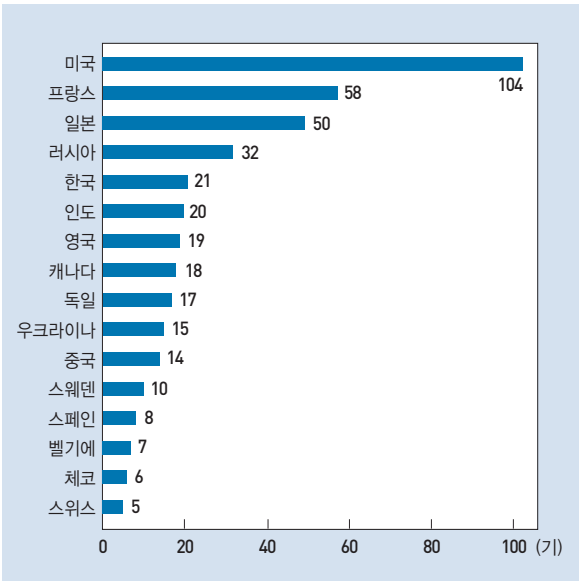
EU 원전 가동 및 건설 현황

현재 EU에는 총 14개 회원국에서 143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국은 프랑스로 2위인 영국보다 3배나 많고 그 뒤를 독일, 스웨덴, 스페인이 잇고 있다. 원자력은 EU 총 전력생산의 약 3분의 1, 전력소비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가마다 원자력 의존도가 크게 다르다.

주요 회원국의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보면 프랑스(74%), 벨기에(51%), 헝가리

¹ EU는 1984년 제1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을 시작으로 현재 제7차 FP(2007~2013년, 예산 532억 유로)를 진행 중이다. EU는 국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유럽 공동의 과학기술 발전과 순수과학연구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프로그램을 FP로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FP에는 27개 EU 회원국과 9개 회원 후보국 및 준회원국 등 총 3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 주요국의 원전 대수



자료: IAEA, 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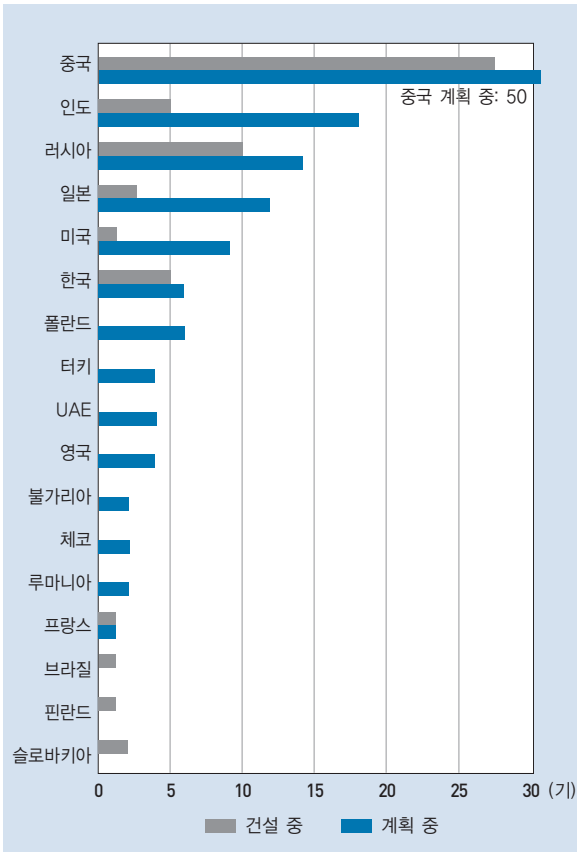
(42%), 스웨덴(38%)이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고 핀란드(28%), 독일(27%), 영국(18%)은 중위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전력생산에서 원자력 비중은 4%에 불과하고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원자력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²

세계 원전의 3분의 1이 EU에 위치해 있는 것에 비해 현재 건설 중인 원전 대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원전 61기 중 43기, 건설을 계획 중인 원전 158기 중 82기가 BRICs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EU 주요국에서는 원전산업 활성화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지 불과 1~2년밖에 되지 않아 건설 중인 원전은 총 4기(슬로바키아 2기, 프랑스와 핀란드 각각 1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건설 계획이 발표된 원전은 총 17기(폴란드 6기, 영국 4기, 불가리아, 체코, 루마니아 각각 2기, 프랑스 1기)로 비교적 많은 편이다.

후쿠시마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른 원전산업

² IAEA DB

★ EU 주요국의 건설/계획 중인 원전 대수



주: 2011년 4월 업데이트 자료 사용

자료: World Nuclear Association: World Nuclear Power Reactors DB

2011년 3월 11일 리히터 9.0 규모의 지진과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하며 후쿠시마에 위치한 원전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원전이 연이어 폭발했고 일본 국민은 물론 주변국도 방사능 누출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세계적으로 원자력 반대시위가 확산되었고 특히 EU 내 최대 원자력 생산국인 프랑스와 예전부터 원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던 독일에서 시위가 심화되었다. 초반에는 원전의 안전성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나, 후쿠시마 사태가 악화되며 EU의 모든 원전을 폐쇄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체르노빌 사태에 대한 악몽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자 EU의 원전 건설업체와 전력회사들은 원자력이 가장 효율적인 차세대 대체에

★ 주요 회원국의 원전 현황

구분	가동 중(기)	가동 30년 이상 (기)	가장 최근 가동 시기 (연도)
프랑스	58	11	2002
영국	19	8	1995
독일	17	7	1989
스웨덴	10	5	1985
스페인	8	1	1988
벨기에	7	3	1985

자료: World Nuclear Association DB

너지라고 주장하며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였다. 그 결과 2010년 말 4개의 전력회사가 운영 중인 독일 내 원전의 수명을 평균 12년 연장시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RWE, E.ON, EnBW, 바텐폴³이 향후 6년 동안 총 140억 유로의 핵연료 관련 세금을 내고 매년 약 2억~3억 유로를 재생에너지 펀드에 기여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글로벌 원전 붐에 힘입어 향후 수십 년간 승승장구할 것으로 생각되던 원자력 산업의 미래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하루아침에 불투명해졌다. 반대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2000년대에 친원자력 정책으로 노선을 바꾼 EU 회원국 정부들은 원전 안전성과 원자력 확대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서둘러 발표했다.

특히 패닉 상태에 빠진 독일정부는 원전 가동시킨 연장 계획을 3개월간 유보하고 1980년 이전에 가동을 시작한 노후화된 원전 7기의 운용을 임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정책에도 불과하고 무려 58년간 집권했던 기민당은 3월 27일에 실시된 바텐-뷔르템베르크 주의회 선거에서 녹색당 연합세력에 패배했다. 바텐-뷔르템베르크 주는 독일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로 원전 4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패배의 충격은 매우 컸다.

5월 초에는 독일정부가 구성한 윤리위원회의 보고

³ 바텐폴(스웨덴)을 제외하고는 모두 독일 기업





서 초안이 공개되면서 메르켈 정부는 더욱 궁지에 몰렸다. 거기에는 2021년까지 독일이 원자력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모든 원전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메르켈 정부는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종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고 5월 22일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원전 중단 시기로 2022년은 좋은 해”라며 기존의 원전 시한 연장정책을 포기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수년간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을 추진해온 이탈리아 정부도 원전 건설 계획을 무기한 보류하는 법률 개정안을 2011년 4월 상원에 제출하며 친원전 정책의 유턴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원자력 정책에 대한 동상이몽

2000년대에 영국과 프랑스처럼 적극적으로 원전 정책을 펼친 국가들은 현재 독일과 이탈리아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폴이 5월 3일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응답자의 39%가 “자국의 원전 운영 안전성에 대해 불신한다”라고 답한 반면,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각각 20%와 12%에 그쳤다. 또한 “원자력 사용에 반대한다”라고 대답한 비율도 독일이 66%로 프랑스(36%)와 영국(30%)의 2배에 달했다.

특히 영국의 원전 계획은 여론, 정치계, 독립감사원 진영 모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5월 초에 발표한 포폴러스의 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최선책으로 원자력을 적극 지지”하거나 “영국의 미래 에너지 소비 구성에서 원전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영국인들이 80%에 달했다. 정치적으로도 영국의 원자력 산업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이 추진한 친원자력 정책을 2010년에 탄생한 보수당 정권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당은 전통적으로 반원자력을 주장하는 자유민주당과 함께 연정을 구성하고 있으나 크리스 혼 에너지·기후변화부 장관은 자유민주당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사용을 지지하

고 있다. 영국의 원전설치 감독보고서도 영국의 원전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5월 18일에 발표된 중간보고서에는 영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 같은 자연재해를 겪을 가능성이 없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중단시킬 필요가 없고 8개의 신규 원전 개발 계획을 지지한다고 나와 있다. 동 보고서가 원전 관련 기업들의 해수면 보호능력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해 향후 원전 건설비용이 늘어날 수는 있으나 영국 전력회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정부도 기존과 동일한 원전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영국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주변국들이 프랑스 원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유럽 전역에 확산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고, 자국 내 여론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EU가 실시할 예정인 안전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원전을 당장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프랑스 원전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기존 정책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입장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가 원전을 폐쇄하면 450억 유로의 비용이 발생하고 전기비용도 4배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국가들의 원전 건설 중단 결정을 “중세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원전산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원자력 의존도가 매우 높고 글로벌 원전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영기업 아레바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EU 원전산업 관련 향후 3대 주요 이슈

❶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가능한가

원자력을 반대하는 측은 독일정부의 결정이 대체에너지 산업 성장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1985년에 원전을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덴마크를 롤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풍력발전이 전력 생산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베스타스 등 세계 주요 그린에너지 기업이 있다. 그러나 독일은 덴마크

★ 2011년 1/4분기 재생에너지 국가 매력도 지수⁴

순위	국가	종합점수
1	중국	72
2	미국	67
3	인도	63
4	독일	62
5	이탈리아	60
6	영국	59
7	프랑스	57
8	스페인	55
9	캐나다	53
16	한국	46
18	일본	45

자료: Ernst and Young (2011), All Renewables Index, Renewable energy country attractiveness indices, 29, 15.

보다 인구가 15배 정도 많고 원자력이 이미 총 전력생산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독일은 높은 수준의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녹색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독일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2016년까지 GDP 대비 0.35% 이하로 운영되어야 하고, 주정부는 2020년까지 재정적자 금지가 법제화되어 있어 신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정부와 전력회사 간의 불화가 대체에너지 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재정건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핵연료 관련 세금과 전력회사의 재생에너지 펀드 기여금이 최근 정책 변화로 백지화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RWE는 정부의 원전 가동 중단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후 이들 간의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⁴ 재생에너지 국가매력도 지수는 재생에너지 시장, 재생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술의 성장 가능성을 장기적·미래지향적인(향후 5년까지) 측면에서 분석한 지표로, 덴마크의 인구 대비 풍력발전 역량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나 향후 발전용량 확대 규모가 한정적이라 총점이 43점(22위)에 불과

윤리의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독일의 원자력이 대체 가능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독일이 전력 공급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빠르면 당장 2011년 겨울부터 태양열과 풍력만으로는 원자력을 대체하지 못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증가해 온실가스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독일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❷ 유럽 원전의 경쟁우위: 안전성

프랑스 기업 아레바는 현재 프랑스 내 3세대 원전(PWR, 가압수로형 원자로) 중 하나인 혁신발전로(EPR)를 플라망빌 지역에 건설하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EPR은 여타 3세대 원전보다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어 3세대 플러스 원전으로 불린다. 전문가들은 EPR과 ABWR 같은 3세대 플러스 원전에 대한 수요가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거의 모든 원전과 최근 문제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이 1970년대 개발된 2세대 원전이기 때문이다. 현재 아레바는 총 4기의(중국 2기, 핀란드와 프랑스 각각 1기) EPR을 건설 중이다.

2009년에 한국의 컨소시엄이 아레바가 포함된 프랑스의 컨소시엄과 경쟁해 아부다비 원전건설 계약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광범위한 패키지 지원이 수주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가격 경쟁력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아레바의 EPR 가격이 한국이 제시한 모델보다 약 50% 높았던 것이다. 아레바의 CEO 안 로베르종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아레바의 EPR 모델이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이유는 안전성 강화에 들어간 추가비용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후 아레바는 설계를 수정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라는 압력을 받았으나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이 같은 비판은 단번에 일축되었다. 세계 원전시장의





규모가 후쿠시마 사태 이전보다 줄어들었으나 안전성이 높은 원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아레바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③ 4세대 원전 개발

원자력의 미래는 2015년과 2030년 사이에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4세대 원전에 달려 있다. 4세대 원자로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3세대보다 더욱 뛰어나 핵에너지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해줄 미래형 원자로를 말한다. 세계 주요국들은 ‘4세대 원자력 시스템 국제 포럼(GIF)’을 설립해 현재 총 6기의 원자로 시스템을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01년에 설립된 GIF는 프랑스와 영국을 포함한 9개 국가로 시작해 스위스(2002년), 유럽원자력공동체(2003년), 중국과 러시아(2006년)가 차례로 가입했다.

현재 GIF의 R&D 비용은 연 4억 달러 수준이지만 4세대 원전 개발과 상용화에 들어갈 전체 비용을 구체화하기는 힘들다. 4세대 원자력 개발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지만 독일이 반원전 정책을 도입하면서 향후 유럽원자력공동체의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GIF에는 미국, 중국, 브라질,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참여하고 있어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도 R&D 활동이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유럽 주요국의 정책 기조 변화로 유럽의 참여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원전 안전성 스트레스 테스트와 향후 전망

2000년대에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EU 회원국의 원자력 관련 정책이 큰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태 이후 회원국 정부들은 자국의 정치상황

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친원자력 정책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고, 영국과 프랑스는 원전의 안정성을 증명해 기존 전략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 2년 동안 EU 회원국들이 유로 지역 재정위기 탈출방안과 관련해 제각각 목소리를 내며 대내외적으로 EU가 지속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향후에는 원전문제도 EU의 분열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전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월에 EU는 유럽 전역에 있는 원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에 동의했으나 테스트의 세부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2개월이나 걸렸다.

반원자력 정서가 강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9·11과 비슷한 수준의 테러공격을 포함한 강력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원했으나 영국과 프랑스는 너무 과도하다며 적극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안전성 테스트와 안보 테스트를 구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지만, 테스트 진행 책임이 개별 회원국 기관에 있고 테스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역시 개별 회원국 정부의 권한으로 간주되어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가 회원국들의 현 정책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EU 원전시장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국 시장이 EU 원전산업에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에는 안전성이 더욱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전 안전성 분야에서 우위를 지닌 EU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 법률시장 개방과 영국 로펌의 대응

Opening up of legal service market in Korea and British law firms' response

Coincidi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EU FTA, Korea's legal service market will be open for European firms from July 1st, 2011. This will affect not only the legal businesses in Korea, but also the citizens through the opening of major service sectors coupled with changes in perception. This h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cused on the issue. With the anticipation of the market opening, British law firms have already evaluated the potential of the Korean market. Especially with lawyers from the United States rushing to South Koreato target the legal service market, European firms are attempting to take preemptive action. The market will inevitably affect domestic law firms' survival through changes in legal fees and other aspects. However, changes are not necessarily harmful from a legal service consumer's view as high-quality legal services and more choices will become available through competition.

한-EU FTA 발효와 한국 법률시장 개방

그간 철옹성처럼 굳게 닫혀 있던 한국의 법률시장이란 한-EU FTA 발효에 맞춰 2011년 7월 1일부터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다. 법률시장 개방은 주요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란 측면과 더불어 법조계 전반에 걸친 지각변동은 물론 기업과 일반 국민의 법률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국내외 안팎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어들였다. 격렬한 찬반 논란과 함께 후유증 등에 관한 무성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전 세계적인 무역과 서비스 자유화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듯하다. 이제 시간문제가 돼버린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로펌은 갖가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유럽, 특히 미국과 함께 법률 서비스의 세계 최강자로 꼽히는 영국의 로펌은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전략을 마련 중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16년부터 실질적인 법률시장 개방

먼저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은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EU FTA와 함께 즉각적으로 발효되는 1단계에는 외국 변호사와 로펌의 한국 진출이 허용되어 연락사무소를 국내에 설립할 수 있다. 이때 사무소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변호사 업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EU FTA 발효 2년 뒤, 즉 2013년부터 시작되

★ 전 세계 로펌 순위(2009년 수익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회사명	수익	본사
1	링클레이터스	2,407.0	영국
2	프레시필즈 브러하우스	2,386.5	영국
3	클리퍼드 찬스	2,340.5	영국
4	베이커 앤드 매켄지	2,112.0	미국
5	스캐튼, 압스, 슬레이트, 미거 앤드 폴름	2,100.0	미국
6	앨런 앤드 오버리	2,023.5	영국
7	레이섬 앤드 왓킨스	1,923.0	미국
8	존스 데이	1,540.0	미국
9	시들리 오스틴	1,489.5	미국
10	화이트 앤드 케이스	1,467.0	미국
11	커클랜드 앤드 엘리스	1,400.0	미국
12	메이어 브라운	1,294.0	미국
13	웨일 갯셀	1,231.0	미국
14	그린버그 트라우리그	1,204.0	미국
15	DLA 파이버 USA	1,178.0	미국
16	김슨 던	1,175.0	미국
17	모건, 루이스 앤드 보키우스	1,120.5	미국
18	DLA 파이버 인터내셔널	1,085.0	영국
19	설리번 앤드 크롬웰	995.0	미국
20	로벨스	984.5	영국

자료: 로닷컴 홈페이지 <www.law.com>

는 2단계에서는 한국 로펌과 외국 로펌 간의 사안별 업무제휴가 허용된다. 프로젝트별 업무 제휴와 함께 한국 및 유럽 로펌 간의 장기적·지속적인 협력도 가능하다.





발효 5년 뒤, 즉 2016년부터 개시되는 마지막 3단계에서는 한국 로펌과 외국 로펌 간의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하고 외국 로펌이 한국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 로펌은 자신들이 고용한 한국 변호사를 통해 사실상 거의 모든 법률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실질적인 법률시장 개방이 이루어진다.

세계 최강인 영국 로펌의 한국 진출전략

영국 로펌은 한국시장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시각은 영국 법률협회(The 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가 2007년 10월에 내놓은 『한국시장 내 법률행위 가이드』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영국 법률협회는 이 자료에서 “최근 한국 변호사의 숫자가 크게 늘었지만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국제 법률서비스 수요를 감당할 만큼은 아니”라며 “경제규모로 세계 11위 내지 12위인데도 불구하고 10개 내외의 로펌이 국제 법률문제를 모두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¹ 한국시장에 풍부한 법률 서비스 수요가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해운업이 발달했던 대영제국의 전통을 갖고 있는 영국 로펌은 특히 해운 관련 법률분야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미 FTA를 앞두고 한국시장 선점 노력

영국을 비롯한 유럽 로펌이 한국 법률시장 진출에 관심을 갖는 데는 미국과의 경쟁구도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한-EU FTA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미 FTA가 비준되면 미국 변호사들도 한국으로 물러와 법률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럽 로펌은 미국 변호사들의 진출이 미뤄지고 있는 현 시점을 활용해 최대한의 선점 효과를 거둔다는 전략이다.

¹ Practice guide: South Korea. (2007. 10. 22.). *The 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 <<http://international.lawsociety.org.uk/node/690>>

★ 영국 로펌 순위(2009/2010년 총 매출 기준)

(단위: 백만 파운드, 파운드)

순위	이름	총 매출 (2009/2010년)	파트너 변호사당 수익 (2009/2010년)
1	클리퍼드 찬스	1,197	933,000
2	링클레이터스	1,183	1,214,000
3	프레시필즈 브릭하우스	1,141	1,406,000
4	앨런 앤드 오버리	1,050	1,100,000
5	DLA 파이프 인터내셔널	581	527,000
6	로벨스	542	663,000
7	허버트 스미스	449.9	862,000
8	슬로터 앤드 메이	439.5	1,840,000
9	에버셰드	355.2	517,000
10	노턴 로즈	307	486,000
11	애서스트	293	689,000
12	시먼스 앤드 시먼스	251	461,000
13	CMS 캐머런 매켄나	214.4	453,000
14	핀센트 메이슨스	206	410,000
15	버드 앤드 버드	201.8	466,000
16	클라이트 앤드 컴퍼니	192	605,000
17	BLP	191	455,000
18	테일러 웨싱	177.9	385,000
19	SJ 바윈	171	447,000
20	애들쇼 고더드	167.5	426,000
20	덴턴 와일드 세입트	167.5	360,000

자료: 더로이어닷컴 홈페이지. <www.thelawyer.com>

몇몇 영국 로펌은 이미 한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영국 대학에서 법을 전공한 한국계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수시로 한국을 방문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로펌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아직은 한국 진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시장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현 단계에서 나서봐야 별다른 실익을 챙길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대형 로펌 중 하나인 에버셰드(Eversheds)의 한국팀장 니컬러스 에머슨 변호사는 “현재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서도 “연락업무 수준의 일만 할 수 있다면 굳이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홍콩이나 도쿄 사무소를 통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

했다. 그는 또 “몇몇 로펌을 제외하고는 아직은 신중한 상태”라고 덧붙였다.²

한국시장 공략에 이미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영국 로펌은 아시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클리퍼드 찬스(Clifford Chance)다. 클리퍼드 찬스는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EU FTA가 발효되는 대로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³ 유명한 영국 로펌 중 DLA 파이프(Piper), 앨런 앤드 오버리(Allen & Overy) 등도 한국시장 진출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로펌의 한국 진출은 그 시기가 문제일 뿐, 올 거라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독일과 일본의 선례가 달라

유럽 로펌이 진출하면 한국의 법률분야는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많은 국내 법률가들은 유럽 로펌의 파상공세로 한국 로펌이 초토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 다른 나라에 법률시장을 개방한 독일의 경우 자국 내 로펌이 전부 분쇄되어 변호사 개개인이 영국 로펌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회사 전체가 흡수합병되었다. 결국 독일에서는 토종 로펌이 모두 몰락하고 대신 영국 로펌이 모든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일본은 법률시장을 개방했지만 토종 로펌이 완전히 몰락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대신 일본 로펌과 외국 로펌 간의 대대적인 합작이 진행되었다. 이는 무엇보다 일본 특유의 법조계 문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요즘은 많이 변했지만 일본에서는 극소수의 인원만이 고시를 패스해 법률가 자격을 얻는다. 이들 대부분은 도쿄대 · 교토대 · 와세다대 · 게이오대 등 소

² 이는 필자가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기획한 한-EU FTA 관련 현장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³ CC Plans South Korea launch as legal market opens to international firms. (2011. 5. 20.). *legalweek*. <<http://www.legalweek.com/legal-week/news/2036362/cc-plans-south-korea-launch-legal-market-international-firms>>

★ 한국 로펌 순위(2009년 6월 현재 변호사 수 기준)

순위	이름	변호사 수(명)
1	김앤장	347
2	광창	211
3	태평양	209
4	화우	181
5	세종	173
6	율촌	135
7	충정	115
8	지평지성	100

자료: 위키피디아

수 명문대 출신으로,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거미줄 같은 인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는 해외에서 불쑥 나타난 외국 변호사들이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이런 상반된 2가지 모델 중에서 한국은 독일보다는 일본에 가까운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 연세대 · 고려대 등 일류대 출신의 극소수만이 사법고시를 합격해 법률가의 자격을 얻는 구조가 그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국내 법률시장의 지각변동 예상

이와 관련해 한 영국 변호사는 “그간 일본의 전례로 미루어 한국에서도 5개가량의 대형 로펌은 계속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중소형 로펌에 대해서는 외국 로펌과의 합병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소속 변호사들이 몸담았던 로펌을 떠나 외국계 회사로 자리를 옮겨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법률시장 개방은 한국 로펌의 생존 여부 외에도 변호사 수입료 등 다른 측면에도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 언뜻 생각하면 새로운 외국계 로펌의 가세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 수입료의 하락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계 로펌이 한국보다 더 비싼 뉴욕이





나 런던의 수입료를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입료는 도리어 오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더불어 법률시장 개방이 마지막 단계로 진입해 외국계 로펌의 한국 변호사 고용이 가능해지면 거센 스카우트 바람이 일어나 변호사들의 봉급이 올라가고 이에 따른 비용이 고객에게 전가되어 또 다른 수입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기업이나 일반인 같은 법률 서비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법률시장 개방이 수입료 인상 같은 부정

적 효과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 종래에는 10여 개의 국내 대형 로펌이 국제업무를 싹쓸이하다시피 했지만 외국계 로펌이 경쟁에 뛰어들면 이 같은 현상은 줄어들 것이다. 이는 자연스레 국내외 로펌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남정호 중앙일보 국제선임기자

다양한 유럽 사회 모델의 역사적 경로

Diversity in Europe's social model

With the expansion of the European Union, the notion of Europeanis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However, in light of the financial crisi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northern and southern member states have become apparent. The sources of those differences are diverse ranging from natural environments to political structures.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the differences from a historical social perspective. Historically, northern and southern European states have developed different systems and institutions, which reflect the different characters of their culture and history. Northern states such as Denmark and Sweden have emphasised social unity and their efforts have built confidence and social capital. Contrastingly, the southern European model could not achieve sufficient reformation and Europeanisation due to incompatible social control and the lack of mutual agreement. Whether or not European integration and Europeanisation along with the economic crisis will become effective strategies is worthy of attention.

유럽통합과 '유럽화'

1990년대 이후 EU 회원국이 증가하면서 유럽통합이 급속히 진전되어 '유럽화(Europeanization)'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¹ 유럽화란 유럽통합 과정이 회원국에 미치는 영향을 일컫는 개념으로, 회원국이 각 부문에서 개혁과 변화를 통해 EU 차원의 세계화와 지역화에 적응하도록 지원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뜻한다.

EU의 경제통합은 1986년 유럽 단일시장 의정서와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으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EU는 회원국의 경제·사회 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EU는 통합의 실질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스트리흐트 조약의 '경제수렴 조건'과 2000년 '리스본 어젠다'로 회원국 간 동질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경제수렴 조건과 리스본 어젠다는 회원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 전반적인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여 유럽화를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리스본 어젠다는 EU의 경제력을 크게 증대시키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삼았다. 저성장과 저효율의 유럽 사회 모델을 개혁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이다.²

경제수렴 조건은 통화동맹을 전제로 EU 회원국 간의 경제적 조건 격차를 해소시켜 경제구조의 동질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다. 1999년 유로화 도입으로 EU는 저금리와 물가 안정, 통화장벽 해소 등이 선순환의 원천으로 작용하여 전반적으로 유로 경제권, 나아가 EU 전체 경제권의 성장률을 높이고 고용 증가 효과를 기대하였다. 실제로 유럽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양호한 성과를 보였고, 특히 남유럽 국가는 유럽경제통화동맹(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참여 프리미엄으로 국가신용도가 상승하고 저금리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제 성장과 고용 증가는 유럽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재정지출과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기 때문에 경제수렴 조건과 리스본 어젠다의 달성은 EU는 물론

¹ 김민준 (2010). "유럽통합과 자본주의의 다양성: 북유럽과 남유럽의 '유럽화' 비교." 『유럽연구』, 28(3), 175-211.

² EU는 5년간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자, 2005년 3월 더욱 강한 리스본 전략을 추진하였다. 주된 내용은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 조성, EU 및 회원국 차원의 규제 개혁, 역내 시장의 확대 및 심화, 성장을 위한 지식과 혁신, 고용 창출, 복지국가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인적자본 투자 확대 등이다.





개별 회원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EU의 경제력을 높이고 회원국의 경제·사회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와 함께 회원국들은 방법과 과정은 동일하지 않았지만 구조 변화를 위해 개혁 등 다양한 적응(adaptation)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증대라는 기대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는지 여부와 회원국 간 경쟁력 격차를 완화하고 경제·사회 구조의 동질성을 제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결과적으로 최근의 남유럽 재정위기가 보여주듯이 경제통합 과정은 EU 국가 간 경쟁력 격차 완화라는 성과를 가져오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리스본 전략은 EU 회원국이 개혁을 통해 사회·경제 모델을 수렴 또는 동질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회원국이 EU 차원의 정책과 전략을 받아들여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달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유럽화를 촉진시킨 것이다.

그러나 유럽화는 기대했던 대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유럽화 자체는 큰 문제 없이 서서히 진행되기는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충격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EU 회원국 가운데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구분이 너무나 확연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 구조 또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북유럽 국가와 남유럽 국가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는 자연환경부터 정치형태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글에서는 역사사회학적 관점에서 그 차이를 간단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다양한 유럽 사회 모델의 역사적 경로

지역이나 국가의 발전 과정은 다양한 역사적 경로(paths)를 보여준다. 유럽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지역적으로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역사적 경로가 갖는 제도와 시스템의 차이에서 일부 비롯되기 때문이다.

위기 이전부터 EU 역내는 지역적으로 산업구조 및 경쟁력, 즉 생산체제뿐 아니라 복지체제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였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재정위기 같은 구조적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EU 차원에서 각 회원국의 제도 개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격차는 크게 완화되지 않았는데, 이는 다양한 역사사회학적 경로들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남유럽 국가가 심각하게 재정위기를 겪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구축된 그들의 생산체제와 사회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유럽 모델의 다양성은 영미형, 사회민주주의형, 유럽대륙형, 지중해형과 과거 동유럽 국가들의 이행체제형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유럽통합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베네룩스 등 6개국이 중심이 되어 시작하였고, 이들은 유럽통합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유럽통합의 핵심 국가들(core Europe)은 유럽대륙형으로 복지제도 등 사회시스템에서 동질성이 높았다. 그 후 1973년 영국과 아일랜드, 덴마크가 가입하여 영미형의 성격이 가미되었으나 여전히 유럽대륙형 성격이 지배적이었다. 더구나 1970년대까지는 유럽통합의 강도가 높지 않아 다양성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81년 그리스, 1986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하면서 EU는 남유럽 모델의 성격을 갖기 시작하였다. 1995년 스웨덴과 핀란드, 오스트리아가 가입하면서 사회민주주의형 성격도 포함되었다. 1980년대부터 세계화가 심화되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유럽통합 과정의 부활로 유럽 역내 단일시장이 구축되면서 다양한 모델이 유럽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이 전개되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 모델 간 경쟁력 차이가 불균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대표하는 덴마크와 스웨덴뿐 아니라 지중해형을 대표하는 그리스와 스페인 모두 1980년대 이후 대륙형이나 영미형 국가들보다 세계화와 유럽통합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³ 유로화에 가

입한 스페인과 그리스는 스웨덴이나 덴마크보다 유럽화의 영향과 압력을 더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U의 압력을 더 많이, 더 직접적으로 받았는데도 그리스와 스페인은 유럽화 적응에 성공하지 못한 반면 스웨덴과 덴마크는 유로화 가입국이 아님에도 결과적으로 EU의 유럽화 조건들을 충족시켰다.

그 결과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EU 내에서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국가와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다. 북유럽 국가와 독일, 네덜란드 등이 전자에 속하고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가 후자에 속한다.

북유럽 모델의 사회적 합의와

평등한 복지국가 전통

스웨덴은 20세기 초반까지 노사갈등이 극심하던 국가 중 하나였는데, 1938년 사회적 대타협으로 복지와 고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이 합의는 스웨덴의 경제 성장과 복지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었으며, 정치·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사회적 합의와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평등과 연대정신으로 사회통합과 결속을 다졌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적지 않은 문제와 위기상황을 맞기도 했지만 좌우파 정당 간, 노사정 간의 조정과 합의로 극복할 수 있었다. 1991년 세계 개혁과 1990년대의 연금 및 복지 개혁이 바로 그것이다.

덴마크는 오랜 노사협력 전통,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합의, 연대와 평등주의 가치, 자유와 경쟁이라는 자유주의적 국민 정서를 특징으로 갖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쟁력을 갖춘 경제와 발전된 복지제도를 자랑하면서 스웨덴과 함께 노르딕 모델을 대표하였다. 역사적으로 노사관계는 법적 규제보다는 노사 자율의 대원칙하에 단체교섭과

³ 특히 자본 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스웨덴은 1980년대 이후 해외 직접투자가 급증하였고, 스페인은 유로화 가입 이후 막대한 규모의 해외자본이 유입되었다. 덴마크와 그리스도 규모는 작지만 이와 유사하였다.

노사협약을 통해 해결하였다. 덴마크는 개방경제로 1970~1980년대 세계화 시기에 어려움을 겪었고 유럽통합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1994년과 2003년 노동시장 개혁과 복지 개혁을 통해 세계화에 대응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유의 노사협력, 사회 코포라티즘제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덴마크와 스웨덴 모두 농민계급의 힘과 노동운동의 정치·사회적 역량이 크고 정치적 대표성을 인정받아 왔다. 농민당은 주요 정치세력으로 초기 복지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노동자의 지지를 받은 중도좌파 정당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정치적·제도적으로 실현하였다. 주요 사회세력과 정치세력은 합의나 연정에 기반하여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 통합과 결속을 중요하게 간주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는 신뢰와 사회자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고비용·고부가가치·고생산성의 모델이다. 노동시장과 경제의 이중구조를 지양하고 포괄적인 복지제도는 분배는 물론 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부패도 거의 없고 기업과 국가의 투명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남유럽의 권위주의체제, 부패 및 사회 분열의 유산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 역시 서로 유사한 문화적·제도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균열된 복지제도와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를 안고 있다.

남유럽 모델의 특징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균열된 복지 및 연금 시스템은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비효율을 낳았다. 역사적으로 스페인 사회는 상층계급과 일반 국민 사이의 계급 격차가 매우 커 ‘두 국민(two nations)’이 존재하였다. 스페인 민중은 자신들을 오랫동안 지배하던 기존 종교와 정치에 반기를 들었고 무정부주의 이념에 경도되어 국가의 통제를 거부하였다. 그 결과 국가의 권위와 지도력은 약화되었고 1936~1939년 내전을 겪으면서 계급과 계층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다. 내전 후 폭력적 권위주의체





제가 지속되면서 모든 권력과 지배의 원칙에 교회와 국가가 최우선이 되어 민주적 절차나 계급 대표성이 무시되었고 특히 노동계층이 소외되었다. 1975년 스페인의 오랜 권위주의체제가 종식되자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었다. 민주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세력은 고용 보호 등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왜곡된 체제 위에 이루어진 복지 확대는 혜택의 차별화를 초래하여 ‘이중 복지국가’ 적 성격을 보였다.

그리스는 비교적 관대한 사회보험이 발달되어 있으나 공공 사회서비스의 수준은 매우 낮다. 사회보장은 직업 범주에 따라 분류되어 있으며, 복지혜택은 사회적 지위와 소득수준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리스 는 오랫동안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지체되었다. 1944년에 시작된 좌우파 간의 내전으로 심각한 사회 갈등과 분열을 겪었고 그 유산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다. 1949년 외세의 내전 개입으로 우파가 승리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좌파의 영향력이 여전하여 정치·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었다. 이에 1967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합법적인 사회주의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지체되다가 1974년에 이르러서야 국민투표로 왕정이 폐지되고 민주적인 좌우 양당 정치구조가 구축되었다.

1974년 권위주의 종식 후 민주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유권자들의 요구가 급속히 증대되었다. 민주화 이후 그리스 정치는 좌우 양대 정당이 주도하였으며 심각한 경제문제와 포퓰리즘적 후견주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고 국가의 역량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 정책의 효과성이나 정부 효율성은 EU의 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좌우파를 막론하고 집권정당은 이익집단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각종 보조금, 고용보호, 임금 인상 등의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하여 복지예산 비중이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할 만큼 복지지출 수준이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분배 효과는 미미하다. 사회보험 혜택이 정규직에 국한되어 있고 저임 일자리 양산과 연금만 관대한 비효율

적인 복지제도 때문이다. 관료주의와 부패, 개혁에 대한 이익집단의 강한 저항, 개혁 주도세력의 허약함과 이에 따른 갈등 조정 능력의 부족 등이 문제다.

제도 변화와 사회적 합의, 투명성의 중요성

역사적 경로가 존재한다고 해서 제도 개혁과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과도한 복지제도로 인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개혁으로 제도의 유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유럽화를 달성하고 고유의 고복지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남유럽 국가는 제도의 경직성과 비효율로 인해 유럽화를 통한 제도 개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경쟁력과 효율성이라는 성과도 가져오지 못하였다.

유럽화는 EU 회원국이 EU 차원의 정책과 제도를 얼마나, 어떻게 수용하고 적응하는가 하는 문제다. 역사적으로 남유럽과 북유럽의 제도와 시스템은 서로 다르게 발전해왔으며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은 문화·역사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유럽통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경로의 파괴가 시도되었지만 고유한 제도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성장 둔화와 고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 노동의 확대에 대응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노동의 양극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였다.

남유럽 모델은 변화와 개혁을 위한 사회적 조정과 합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여 개혁의 성과와 유럽화가 미흡하였다. 개혁을 반대하는 비토 문제 또한 심각하며 개혁연합 세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사실 유럽화 적응을 위한 타협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주체들이 개혁 비토를 극복할 역량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부패와 탈세, 제도의 비효율과 경직성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구조적으로 신뢰와 사회자본을 포함한 공식·비공식의 제도적 기반이 재구축되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09년에 본격화된 유로존 재정위기로 EU는 긴축 등 다양한 제도 개혁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부패와 지

하경제의 해결 없이는 그 어떤 개혁도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 EU는 회원국의 부패 척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부패로 인한 비용은 EU 전체 GDP의 1%에 달한다고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2013년부터 회원국의 투명도를 공개하고 부패상황을 감시할 예정

이다.⁴ 이러한 조치가 과연 유럽통합과 ‘유럽화’를 위한 새로운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

김인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⁴ A Greek crisis of cronyism and corruption. (2011. 6. 8.). *Financial Times*. <<http://www.ft.com/intl/cms/s/0/ef4ba442-9214-11e0-9e00-00144feab49a.html#axzz1Opk00Vv9>>; EU Commission seeks to tighten anti-corruption efforts. (2011. 6. 6.). *WSJ*. <<http://online.wsj.com/article/BT-CO-20110606-708245.html>>; Corruption: stepping up the fight. (2011. 6. 6.). *Europa*. <http://ec.europa.eu/news/justice/110606_en.htm>





환경규정은 무역에 걸림돌인가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Trade

ENEPRI (European Network of Economic Policy Research Institutes) has recently published a working paper which analyses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major EU countries' exports. There are currently over 250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 and around 20 of them include provisions that can affect trade. This paper analyses the effects of three major MEAs, namely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the Kyoto Protocol, on the EU15 bilateral export flows. According to its estimates results, the average positive variations of EU exports induced by UNFCCC, Kyoto and Montreal agreements over the period 1988-2008 are 22%, 32% and 35%, respectively. Based on this evidence, the paper concludes that "at least for EU members, on average,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have not constituted a secondary trade barrier in the past 20 years."

경제정책연구유럽네트워크(ENEPRI: European Network of Economic Policy Research Institutes)는 최근 환경규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EU의 높은 환경기준 정책이 EU 수출국가에게 일종의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공식 해명인 셈이다.

환경과 경제, 이 두 가지는 모두 국경이나 세대를 초월하는 전 지구적 상호 의존성을 가진다. 하지만 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비해 환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적을 뿐 아니라 일관성 있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그동안 산업계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환경규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환경규정이 일종의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해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결과적으로 무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각국이 무역 경쟁력만을 고려한 경제정책을 시행하면 점점 '최소 환경규제' 경쟁으로 치닫게 되고 이는 대표적인 '시장 실패'인 환경 파괴를 야기해 결국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한 EU의 입장은 비교적 명확하다. EU는 '유럽 2020 전략'이 지향하는 것처럼 무역과 경제 정책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이러한 정책을 각 회원국이 실현할 수 있도록 통합정책을 마련하고 있다.¹ EU 회원국이 현재 시

행하고 있는 환경 관련 협정은 250개 이상이며, 이 중에서 실제로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20개 정도다. 특정 보호동식물을 원료로 하는 제품의 수출입 금지와 특정 환경에 대한 평가가 누락된 제품의 유통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몇몇 협정은 WTO 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을 정도로 EU의 환경 관련 규정은 철저하다.

보고서는 이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자간 환경협정(MEAs: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세 가지-유엔기후협약(UNFCCC), 교토협약, 몬트리올협약-가 EU 15개 회원국 간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였다. 1988년부터 2008년까지의 무역수치를 원데이터로 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수출국과 수입국의 GDP, 교역거리 등과 같은 일반적인 무역변수, ② 가격지수 등을 포함해 기존 연구에서 더미변수로 처리한 다자무역저항지수(multilateral trade resistance index), ③ 환경규정 변수 등의 세 가지 변수를 함께 모델에 적용하였다.

¹ EU는 202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감축을 목표로 삼았지만, 최근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2050년까지 80~95% 감축을 목표로 이에 필요한 자원 효율성 제고와 인프라 구축 계획을 담은 「에너지 로드맵 2050」을 발표하였다(EU Commission (2011). Public consultation: Energy Roadmap 2050. (김경훈 (2011). "EU 기후변화 규제 강화와 산업계의 대응." "EU Brief", 3(1), 18-23에서 재인용).

★ 교호작용 효과

구분	Coeff.
유엔기후변화협약 X EU	.01
몬트리올협약 X EU	.06
교토협약 X EU	.14 ***

분석 결과 환경규정은 국가 간 무역에서 걸림돌이 아니라는 EU의 기존 입장이 재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유엔기후협약과 교토협약, 몬트리올협약이 1988년부터 2008년까지 EU 무역에 각각 22%, 32%, 35% 수준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p < .01$ 수준 통계적으로 유의함). 더욱이 이 요인들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상호 연관시켜 회귀분석한 결과 각 요인 사이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EU와 WTO 가입, 환경규정 모두 무역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며, 이 두 가지 요소-EU 회원, 환경규정-가 교호(상호)변수로 투입될 경우에는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유의미하게 해석된다. 특히 EU 회원국 요인과 교토협약 요인의 교호(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U 회원국 간의 무역이 EU와 환경협약 가입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나아가 이 두 요인의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환경규정 이외에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를 함께 회귀분석한 결과는 환경규정과 무역의 관계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준다. 특히 EU 회원국 요인과 교토협약 요인의 교호(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U 회원국 간의 무역이 EU와 환경협약 가입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나아가 이 두 요인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EU 국가 간 무역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환경 관련 규정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수치상으로 보면, 다자간환경협정은 EU 회원국 간의 무역에서 22~35%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EU와 환경규정 가입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향후 EU에 가입하려는 예비 EU 회원국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정책 제안이다. 그러나 EU의 환경규정이 역외 국가들의 EU 진출에 대한 무역장벽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 보고서는 정확한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자료: Santis, R. De (2011).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Trade in the Main EU Countries: Conflict or Synergy? (Working Paper No. 56). European Network of Economic Policy Research Institutes.) ★

정민경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제7회 브뤼셀 포럼 The 7th Brussels Forum

On May 11th, 2001, Yonsei-SERI EU Centre and KMDI jointly held the Brussels Forum surrounding the theme of "Financial Crisis in Europe and preparing for EU-Korea FTA." The forum, which was held at the Prima Hotel, was hosted by Young-Yeol Park, the Director of the EU Centre. The Representativ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or FTA negotiations, Suk-Young Choi, explained the implications of the Korean-EU FTA on the South Korean Economy while Deuk-Gab Kim, a senior research fellow at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presented on the current state of the European financial crisis and its potential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hey were joined by the head of the Europe and Americas Division of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Jae-Chun Yoon, who discussed the changes in the European trade environment and corporate response plans before and after the EU-Korea FTA. The attendees from both academia and business explored in depth the possible ripple effects of the FTA. The audience were allotted time to raise questions for the panelists at the end.

2011년 5월 11일 연세-SERI EU 센터는 한국경영연구회(KMDI)와 '유럽의 재정위기와 한-EU FTA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제7회 브뤼셀 포럼을 공동 주최하였다. 프리마 호텔에서 박영렬 연세-SERI EU 센터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가 '한-EU FTA와 한국 경제'에 대해 설명하였고,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유럽의 재정위기 현황과 한국에 미칠 영향에 관해 발표하였다. 윤재천 KOTRA 구미 팀장은 한-EU FTA를 전후로 한 유럽 무역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재계와 학계를 아우른 참석자들은 각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EU FTA의 파급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발표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1회 EU Core-Circle Society 세미나 The 11th Core-Circle Society Seminar

The 11th Core Circle Society Seminar was held at the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on May 17th, 2011. During the seminar, Bank of Korea's Foreign Inquiry Deputy Director, Jin-Ho Park examined the possibility of Europe's worsening financial crisis spreading to even a sizeable country such as Spain. Director Park closely analysed the current state of the financial crisis and its root causes as well as the structure of the Spanish economy using the data compiled through his interview with the administrator of the Bank of Spain and his research. Participants at the seminar debated on the state of the Spanish economy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EU market as well as the structural limitations and the future measures of the bailout plan.

연세-SERI EU 센터는 2011년 5월 17일 삼성경제연구소 회의실에서 제11회 EU Core-Circle Society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스페인까지 확대될지에 대해 박진호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차장이 발표하였다. 박진호 차장은 스페인 은행 관리자와의 면담 등 생생한 실무경험을 통해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럽 재정위기의 현상과 원인, 스페인의 경제 구조 등을 집중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참석자들은 스페인 경제와 EU 시장과의 연관성, EU 구제금융 대책의 구조적 한계와 향후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회 EU Week 개최 The 2nd EU Week celebrated

In light of Europe Day (May 9th), Yonsei-SERI EU Center held the 2nd annual EU Week celebrations this year on Yonsei University's campus. Students participated in essay competitions, mock EU summit, EU leadership debates and other EU related activities. College and graduate students demonstrated their knowledge on the EU and exchanged new ideas through various academic debates. With the support of the Bulgarian Embassy, a photo exhibition was also showcased at the Global Lounge during the week of the festival. Photos illustrating the Bulgarian natural landscape and UNESCO World Heritage sites captured the attention of many students.

More than 50 students entered the essay competition with the Korea-EU FTA as its topic. In the final round, students were required to give presentations on their papers. The EU leadership debate, co-hosted by the EU Centre and Yonsei Leadership Centre, attracted a total of 19 teams. Students were able to deepen thei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through discussing important themes such as the Korea-EU FTA, EU integration, and more.

On the last day of the festiva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mock EU summit at the Janggiwon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representing an EU member nation of their choice. Following the actual proceedings of the European Union, students debated issues such as the Korea-EU FTA and the financial difficulties that the EU faces.

At the same place where the mock summit took place, the best participants in each event were recognised with scholarships and awards and the Trade Negotiations Representative fro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uk-Young Choi, gave a special lecture at the end of the award ceremony.

This year's festival was even more special a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various European companies such as Lufthansa sponsored roundtrip flights to Europe and other gifts. After the award ceremony, students continued the festivities by attending the Open EU Night celebrations and the EU Society's inaugural ceremony at Allen Hall. The 2nd annual EU week successfully came to a close in the midst of the students' enthusiasm and passion.



제2회 EU Week 개최 The 2nd EU Week celebrated

연세-SERI EU 센터는 2011년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유럽의 날(5월 9일)을 기념하여 외교통상부와 루프트한자를 포함한 여러 유럽기업의 후원을 받아 EU Week 행사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하였다. EU Week는 학생 논문대회, EU 모의 정상회의, EU 학생 리더십 토론회 및 EU 홍보행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EU와 유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참가하여 기량을 펼쳤으며, EU에 관한 열띤 토론을 통해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하였다.

글로벌라운지에서 열린 EU 홍보행사에서는 불가리아 대사관의 후원으로 불가리아의 자연경관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한-EU FTA'를 주제로 열린 논문대회에는 5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는데, 5월18일 결선에서는 논문 작성자들이 직접 자신이 쓴 글을 상세히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세-SERI EU 센터와 연세 리더십 센터가 공동 주최한 EU 리더십 토론회에는 총 19팀이 참가하여 한-EU FTA와 EU 통합

등의 주제에 대해 토론하며 EU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EU Week의 마지막 날인 5월 20일, 장기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EU 모의 정상회의에서는 7명의 결선 진출자들이 각자 자신이 선택한 EU 회원국의 입장에서 EU 기구의 진행 절차를 지키면서 한-EU FTA, 재정문제 같은 여러 현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 통상교섭대표의 특강이 열려 강연을 듣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국제회의실을 찾았다. 같은 날 장기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EU Week 시상식에서는 각 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기량을 보인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상장을 수여하였다. 특히 올해 EU Week에는 외교통상부와 루프트한자 항공, SK건설, 그린포스 코리아, BMW Korea, 코오롱건설 등의 후원이 있었다. 이어서 저녁에 알렌관에서 열린 EU Night 축하행사와 EU Society(유럽 관련 학생 활동과 학생 교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학생 단체) 출범식을 끝으로 한 주간의 EU Week를 성공적으로 마감하였다.





제2회 EU Week 개최 The 2nd EU Week celebrated



한국-EU 포럼 공동 주최기관으로 선정 Korea-EU Forum Co-Sponsored

Yonsei-SERI EU centre has been selected as a co-sponsor of Korea Foundation's Korea-EU forum. On May 24th,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as signed with the Korea Foundation at Yonsei University. The EU Centre plans to conduct the forum as a meeting point between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and important figures from diverse areas of academia, education, culture, and media from both Korea and the EU. They will share their opinions on topics including "Peace in Northeast Asia and European Union's Role," "Expansion of Economic and Industrial Relations," "European Un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and "Cultural Exchanges and Educational Collaboration between the EU and South Korea." Furthermore, through mutual exchanges of ideas and debates on major issues of each region, the forum will seek to strengthen the notion of future synergetic cooperation and to bolster relations among the high-ranking officials. The inaugural Korea-EU forum is currently scheduled for late 2011 in Brussels and the second forum for 2012 in Seoul. Robert Schumann Foundation, an institution founded in 1991 for EU research and outreach, has been chosen as the forum's partner organisation. To ensure the forum's successful opening, the Yonsei-SERI EU Centre plans to establish collaborative relations with other related organisations and to advance initiatives such as an international exchange student programme.

연세-SERI EU 센터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한국·유럽연합(EU) 포럼 공동 주최기관으로 선정되어, 5월 24일 연세대학교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사업 추진과 관련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연세-SERI EU 센터는 한-EU 포럼을 '동북아 평화와 EU의 역할', '한-EU FTA와 경제 산업 관계의 확대', '한-EU 문화교류 및 교육협력', 'EU의 환경 및 국제협력과 한국에의 함의' 등의 주제로 양 지역의 정부, 의회, 재계, 학계, 교육, 문화계, 언론계 등을 대표하는 고위 직 인사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 지역 주요 현안을 주제로 의견 교환과 토론을 벌여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고위 인사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차 한국-EU 포럼은 2011년 하반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이며, 제2차 포럼은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포럼의 유럽 파트너 기관으로는 1991년에 설립되어 EU에 대한 연구 및 대외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로버트 슈만 재단이 선정되었다.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연세-SERI EU 센터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의 후속-파생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네트워킹

루프트한자의 또 다른 작품.

한국에서 유럽을 연결하는 가장 편리한 네트워크

부산 및 서울에서 170개 이상의 유럽의 도시로 운항하는
편리한 스케줄을 이용하여, 루프트한자의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 만큼 비즈니스 네트워크도 확장하세요.
서울 - 프랑크푸르트 주 7회 운항, 부산 - 서울 - 뮌헨 주 6회 운항



There's no better way to fly.

Lufthansa

루프트한자 독일 항공

